

구미·포항, '로봇 특화단지' 거점으로... 제조 AX 혁신

1.4조 규모 투자 등 효과 기대
'K-로봇 메가클러스터' 모델 제시
인력양성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경북도가 구미와 포항을 거점으로 산업통상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봇 분야)' 지정에 나섰다. 사진은 LG유플러스의 AI 에이전트 '익시오' /뉴시스

경북도가 구미와 포항을 거점으로 산업통상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봇 분야)' 지정에 본격 나섰다. 로봇 핵심기업과 연관 제조 생태계가 집적된 두 지역을 축으로 차세대 제조산업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구미와 포항을 제조 AX 혁신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로 동반 육성해 지역 제조업의 구조 혁신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4대 전략과 8대 중점과제에 따라 핵심 사업을 집중 지원해 ▲제품 개발 30종 ▲로봇기업 150개사 육성 ▲보급·확산 100건 ▲전문인력 3070명 양성 등의 성과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2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화단지 지정 이후에는 인접한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해 로봇의 실환경·가상환경 실증, 성능평가·인

증, 데이터 활용과 AI 고도화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검증체계를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차세대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자율제조 확산으로 제조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경북은 이미 반도체(구미), 이차전지(포항), 바이오(안동·포항) 특화단지가 지정돼 있다. 여기에 로봇 분야까지 더해 국가 첨단 제조 생태계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로봇과 방산을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 역시 핵심부품 자립화와 완제품 상용화, 현장 실증을 포함한 전주기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북도는 이에 대응해 구미·포항을 양대 축으로 하는 'K-로봇 메가클러

스터' 모델을 제시했다. 부품-완제품-AI 실증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지역 내에서 완결하겠다는 전략이다.

경북도와 구미시, 포항시는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인력 양성·유치, 기업 지원, 인프라 개선 등 산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에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이 공동 참여해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경북은 최근 산업통상부 AI팩토리 사업에서 방산·자동차 등 5개 과제가 선정돼 국비 187억 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로봇 특화단지 지정이 기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전략산업과의 시너지를 높이고,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산시 초등학생 문화 예술활동비 지급

울산시가 7~12세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 예술활동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울산아이문화패스'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아이문화패스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아동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는 울산형 문화복지 정책으로, '꿈쟁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핵심 시책 가운데 하나다. 자녀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7~12세 아동 전원이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경북도

622억 투입해 산사태 예방

경북도가 이달부터 622억원(국비 436억, 도비 131억, 시군비 55억원)을 들여 산사태 예방사업에 들어가 여름철 장마 전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사업은 사방댐 건설(100개), 계류 보전(60km), 산지사방 조성(24ha), 산림유역 관리(18곳) 등으로 추진된다.

도는 사업 완료 후에도 정기점검과 준설 등으로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산사태 취약지에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남 거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의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거창군

거창군, 관광객에 최대 50% 환급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선정
금액 50%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
내달쯤 시행... 권역 관광벨트 연계

경남 거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의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3억원을 포함한 총 1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따냈다.

이 사업은 전남 강진군의 반값 여행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에는 거창군을 포함해 전국 16개 기초자치체가 선정됐다.

운영 방식은 방문자가 거창군에 사

전 신청한 뒤 숙박·식음료·관광 체험 등에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결제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형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10만원, 2인 이상 참여 시 최대 20만원이며,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올해 안에 거창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전용 누리집과 모바일 지역화폐 가맹점 정보 구축을 마친 뒤 오는 4월쯤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거창군은 이번 반값 여행 혜택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난해 완성한 '동서남북 4개 권역 관광벨트'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41곳 정비

총 16억 6000만원 투입

경남도가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위험을 줄이고 도민 주거 환경을 높이기 위한 정비 지원에 본격 나선다.

도는 올해 12개 시·군,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총 16억 6000만원을 투입하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417개 단지에 총 166억원이 투입됐다.

지원 대상은 사용 검사일에서 20년이 지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아닌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지원 범위는 입주인 공용시설 보수·정비에 한정되며 외벽 도색·옥상 방수·승강기 교체·노후 배관 교체 등이 포함된다. 세대 내부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벽 도색을 마친 소규모 공동주택 모습. /경남도

이번 사업은 안전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스프링클러·방화문 등 화재 예방 시설과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대피로 자동개폐장치 등 비상시설 공사가 우선 순위에 오른다.

실제 함안군 한 노후 연립주택은 준공 30년이 지나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도색이 벗겨지는 등 안전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 사업을 통해 보수를 마친 뒤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된 사례로 꼽힌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북문화관광공, 日 기업관광 공략 본격화

기업회의·포상관광 인프라 소개

경북문화관광공사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발판 삼아 일본 기업회의·포상관광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고부가가치 기업관광 수요를 전략적으로 끌어들이며 경북을 아시아 기업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지난 2월 경주에서 일본여행업협회 JATA 회원 여행사 가운데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관계자들을 초청해 환영 만찬과 간담회를 열고, 경북의 기업회의·포상관광 인프라와 인센티브 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번 일정은 한국관광공사 기업회의 인센티브팀과 일본팀, 도쿄지사, 오사카지사가 공동 추진한 상품 개발 인스

펙션 투어의 경북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공사는 첫 공식 행사로 환영 행사와 홍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APEC 개최를 통해 검증된 국제행사 운영 역량과 경북 고유 관광자원을 결합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일본은 기업 단위 포상관광 제도가 활성화된 대표 시장으로 꼽힌다. 한국 역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목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회의·포상관광은 일반 단체관광에 비해 체류 기간이 길고 1인당 지출 규모가 큰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숙박·식음·교통·관광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공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약 20여 개의 기업회의·포상관광 상품이 개발·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시, 올해 첫 추경 2813억 편성

올해 본예산비 1.6% 늘어
민생경제 회복,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부산시는 올해 본예산 17조9311억원 대비 1.6% 증가한 2813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2026년 보통교부세 확정액 내시 등으로 추가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제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도시 도약' 분야에 993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727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화폐 동백전은 6월까지 월 한도 50만원, 캐시백 10%를 적용해 확대 운영한다. 전통시장 100곳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회 추가 개최하고, 시장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컨설팅을 4곳에 신규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총 668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이차보전도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외대

다국어 AI 특화 인재양성 나서

부산외국어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2026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AI 분야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외대는 올 4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간 국고 약 71억원을 확보해 '다국어 기반 AI 특화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교육 과정은 2개 트랙으로 운영된다. '다국어 AI 데이터 구축 트랙'에서는 글로벌 언어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제·어노테이션·프롬프트 설계·품질 평가 등 실무 역량을 갖춘 AI 학습용 데이터 전문가를 길러낸다.

/부산=이도식 기자